

“별이 된 304명,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분향소에 1000여명 발걸음...노란리본 등 희생자 기려 남구청사 등에 추모 공간 마련...“안전사회 출발점”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할 때, 그 기억은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4월 16일)를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에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애도를 넘어 ‘기억을 통한 변화’를 다짐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이 마련한 시민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로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고 향을 올리며 짙지만 깊은 묵념으로 넋을 기렸다.

묵념을 마친 뒤에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다수 목격됐다. 분향소 인근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72시간의 기록’ 앞에서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되짚으며 한동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이어졌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와 노란 리본 등이 빼곡히 쌓여있었다.

“304명의 희생자들 잊거나 익숙해지거나 무뎠어지지 않겠습니다.” “2014년의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평안하게 보내시길” 등 시민들이 남긴 문장들은 각각 다른 목소리였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공통된 다짐이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0)는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억하지 않으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추모를 통해 기억해야 한다”며 “작은 관심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15일 광주 서구청 광장 화단에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직원들이 노란 바람개비 304개를 바라보며 추모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분향소에는 학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전북 정읍 정산중학교 학생 20여명은 옛 전남도청 일대를 탐방하던 중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됐을 것”이라며 “기억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남은 이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시민분향소는 지난 11일 설치된

이후 이날 오전까지 1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광주 남구청 1층 로비에는 ‘생명이 썩는 세월호 기억의 나무’가 마련됐다. 시민들은 노란 리본에 각자의 기억과 다짐을 적어 나무에 매달며 추모의 뜻을 이어갔다.

앞서 광주 북구는 지난 13일 구청 광장 화단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과 바람개비를, 청사 외벽에 ‘잊지 않

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오는 17일까지 추모 주간으로 운영한다.

세월호 12주기 당일인 16일에는 광주·전남 전역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오전 8시부터는 북구 문흥동·일곡동, 광산구 수완동 등지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억 피케팅’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손팻말과 노란 리본을 들고 도보 행진에 나서며 참사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4시 16분부터는 5·18민주

광장에서 ‘울음을 멈추게 하라’를 주제로 한 광주기억문화제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최근 사회적 참사를 함께 조명하며 안전 사회의 필요성을 환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 진도 맹골수도 사고 해역에서는 산상 추모식이,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는 기억식이 각각 열린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유포 징역 5년...“엄중처벌 불가피”

200개가 넘는 미성년자들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남성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장우석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전송·반포), 협박 등 8개 혐의에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1월 사이 전남 한 주거지에서 딥페이크 AI프로그래밍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다수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성인의 몸에 합성, 200개 이상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온라인 유포 시 전부 찾아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고용 외국인 노동착취’ 경찰·노동당국 수사 본격화

임금체불 사업주·브로커 입건...6월 14일까지 특별대응

전남 고용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벌어진 임금체불·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군 굴 양식장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2곳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과 불법중개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사업주와 브로커들이 형사 입건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간 브로커 2명은 매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약 700만원을 가로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로 시작했다. 초기 기획 감독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의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됐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금명세서 미교부, 야간근로 등의 절차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불량 등 산업안전 규정 위반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총 2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과 함께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노동당국이 추가로 점검한 고용지역 취약 사업장 5곳에서도 모두 임금체불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관련 수사에 나서고 있는 전남경찰청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구조적 인권침해 범죄’로 보고 특별대응에 나서고 있다. 22개 일선 경찰서 형사팀 1

개를 전담팀으로 지정했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탐문과 첩보 수집 등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남청 형사기동대는 피고발인 5명을 형사입건한 상태다.

또 전남청은 브로커 개입 구조와 고용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100일간의 특별활동이 종료되는 6월 14일까지 단순 사업주 처벌을 넘어 알선·소개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동당국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임금체불과 폭행·괴롭힘, 브로커 착취 등 신고 사안에 대해 기획 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86억 부실대출

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지역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재판 시절 지위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부실·한도 초과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김송환)는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6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무책임자 B씨(5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를 이용해 개인 및 법인 대출 형태로 총 86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개인 대출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직원들

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원급인 B씨 등 직원들을 압박해 실행한 부실대출 중 약 19억원이 실제 금고의 손실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부실 대출을 방지해야 할 최고 책임자임에도 오히려 이를 주도했다”며 “금고 자금을 개인 필요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해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손실은 결국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죄질이 무겁다”며 “금고 측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담보 가치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공모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모집합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상임임원 2명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 비상임임원 4명 (항만위원)
- 원서접수
 - 기간 : 2026.04.16. 16:00 ~ 2026.04.30. 18:00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우편번호 57771, 전남 광양시 황만대로 465, 경영지원부(9층))
 - 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심사방법
 - 상임임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비상임임원 : 서류심사
- 기타사항
 - 응모지원서 등의 제출서류 서식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www.ygpa.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경영지원부, ☎ 061-797-4351, 4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인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미지가 있으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TV
▶구독·좋아요·댓글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화 자초의 성지, 전남 투룬산 대룡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희사

광고·시청문의 062)370-7077